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38호
2022. 1. 3

신년특집

『2021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분석과 2022년 과제』

정책동향

■ 2021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내용

■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

산업정보

■ 글로벌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 추진 동향

건설논단

■ 건설산업, 호랑이를 타고 날아오르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2021년 주요 건설정책 추진 내용

- 업 환경 변화 심화 시기, 신년에는 보다 기민한 대응책 마련해야 -

■ 지난해 또한 건설업을 둘러싼 수많은 정책 입안·추진 → 업 환경변화 심화

- 대표적 법제와 규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지난해(2021년) 역시 여러 건설업 관련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업 환경의 변화를 불러일으킴.
 - 건설 관련 주요 부처별 건설업을 규율하는 직접적 정책으로만 한정하여 주요 정책의 내용만을 요약하여 살펴보다라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어 추진되었음(<표 1> 참조).
 - 전반적으로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규제 개선사항과 건설업 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한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규제 및 처벌의 신설·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마련되어 사업 환경의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총평 가능함.
- 우선 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경우 <표 1>과 같이 가장 많은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거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2021년의 경우 지난 2018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개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과 더불어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人災)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점검 관련 제도 강화 관련 정책이 주로 추진됨.

<표 1>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 건설업 정책 추진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생산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추진(3개 유형, 22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 시 부대공사 미기재 - 공사예정금액이 2~3억원 전문공사 중 관급자재 비중 1/3 이상인 경우 상호진출 배제 - 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시 자본금 확인 절차·방법 간소화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추진(20년 7월~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시행(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직접노무비 적용 대상 근로자 대상 우선 적용 추진
기술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부담 요구 퇴출을 위한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 마련(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정보공유시스템) 등록을 통해 활용 확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 현장 대상 공사비 및 건설기준 특례 적용 -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추진

<표 1> 2021년 국토교통부 주요 건설업 정책 추진 내용-(계속)

분 야	주요 내용
안전·보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워크레인 작업절차 준수와 철저한 장비 관리 및 관리·감독 강화지침 마련(7/2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10/5) • 건설안전 강화대책 마련(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 안전역량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입찰 평가항목 중 건설안전 가점 확대 등) - 건설현장 안전점검 대폭 확대(2021년 현장점검 6배 확대, 2023년 소규모 민간공사 전수 점검 추진) •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 마련(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계획서 작성 자격 기준(건축사, 기술사) 신설 - 해체허가 대상 확대 및 허가 대상 공사의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 해체허가 대상 공사 상주감리 의무화 및 배치기준 마련 - 착공신고 도입, 변경승인 및 영상 촬영 의무화 등 해체공사 현장관리·감독 강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자체 확대 및 현장 위반사항 적발 시 허가권자 권한 강화 - 착공신고 수리 전 현장점검 의무화 - 감리자 교육 시간 확대 추진, 해체계획서 작성자 교육 신설 등 해체공사 관계자 교육 시행 강화 - 해체계획서 작성 부실 및 상이한 시공 등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및 상향
시장질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 마련(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감리의 하도급 관리 의무화 - 건설기술인 관리 강화(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기술인 중복배치 축소(5억 미만 3개 → 2개 현장)) - 건설기능인 전자적 노무관리 강화(임금직불제 및 전자카드제 조기 확산 및 KISCON 연계) - 국토부 및 지방자치단체 내 특별사법경찰 도입 - 불법하도급 적발 시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 강화(제한대상 및 제한기간 확대) - 불법하도급 적발 시 처벌대상 확대·수준 강화 - 불법하도급 적발 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등록말소 강화) -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불법하도급 적발 시 도급액의 10% 위약금 부과 - 불법하도급 가담자 대상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 시 처벌감면(리니언스) 및 신고포상금 도입 - 불법하도급 준 업체 시공능력평가 시공실적 차감 확대(30% → 60%) - 불법 재하도급 발생 시 하도급자의 하자보증 무효화 • 불법행위 처벌 강화(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1억원 → 2억원) - 무등록업자 하도급 시 3진 아웃 추가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
기타 기준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애로형 건설규제 개선(3/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 등 불가항력 사유 시 건설업 교육 기간 유예 근거 마련 - 가스시설공사 업무내용 현실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우수 중소기업 우대(0.5점) -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 •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발주자와 도급인간 공평 부담)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원본대조 확인 각서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및 직인 날인 면제)

- 두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경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관련 조직 정비를 추진(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표 2>와 같이 예년의 수준을 상회하는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였으며, 이 외에도 적극적 현장점검 또한 병행하여 추진함.

<표 2> 2021년 고용노동부 주요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안전·보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대 공공 발주자 안전임원 대상 재해예방 간담회 개최(2/24)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 발생 원도급자가 재사망사고 발생 시 본사와 전국현장 특별감독 시행 - 최근 3년 내 사망사고 발생 원도급자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의 경우 패트를 점검 및 감독 집중 실시 - 1억 미만 초소 규모 건설현장 대상 기술지원 및 안전시설 재정 지원 대폭 확대 -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향상을 위한 총계약 금액 기준 안전관리비 계산 •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강화(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관리하는 안전보건대장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의무 부여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주체 변경(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계약주체 도급인 → 발주자로 변경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 -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선정 기준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준 정비 및 추가 보완대책 마련(12/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자체장의 책무 및 산재예방활동 근거 규정 신설(11/19 시행) - 건설기계 안전장비 등 스마트 안전시스템 지원 확대 -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 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 검토·추진
근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7/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부여(하도급자 소속 근로자 포함)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활성화를 위한 합동 캠페인 실시(11/25)

- 세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위탁 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표 3>과 같은 다양한 규제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직권조사 대상도 확대 운영함.

<표 3>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분 야	주요 내용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최대 벌점 50% 경감 등 피해 구제 관련 벌점 경감 사유 신설 - 현행 벌점 경감 사유 중 법 목적 달성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사유(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등)에 대한 벌점 경감 사유 완화 -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확대(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 → 45억원 미만)

<표 3>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 내용-(계속)

분 야	주요 내용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개정(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 하도급법 위반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제 도입 및 법원의 비밀 유지 명령 도입 -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 - 하도급자 원도급자에게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입찰참가자격 요청 절차 6단계 구분 등) -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 추가 공사 금액과 관계없이 서면 발급 의무 준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9/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 보존 서류 대상 확대(비밀유지계약서, 대금산정 기준 및 내역 관련 서류 추가) - 비밀유지계약서 기재 사항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개정(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 사유 확대 - 건설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입찰금액, 낙찰 결과 및 유찰 시 유찰 사유 입찰참가자 공개 의무화)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도급자에게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대한 공시무 부과) - 공정거래법상 동의를결제도를 하도급법에 도입, 동의를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마련 -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 도입(분쟁 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중지제도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 상향식(bottom-up) 제·개정 방식 도입 - 하도급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행위 하도급법 규율 대상 포함 -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 납부 범위(10억원 초과 → 5억원 초과)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제작·배포(1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의 비밀유지 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이 중견기업 등 2·3차 거래단계의 협약 참여 독려 시 좋은 점수 부여 - 대기업의 협력사 안전관리시설 및 안전관리 관련 비용 지원 등 산업안전 예방 활동 지원에 대한 가점 부여(3점) - 어음 교부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하여 교부일 단축 유도

● 지금까지 살펴본 규제 강화 중심의 주요 부처의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과는 달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건설업 활력 제고와 관련한 여러 전향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함(<표 4> 참조).

● 이 외에도 조달청 또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여러 관행 및 기준 정비와 더불어 공공공사 입찰 시 입찰참가자의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던 ‘손톱 및 가시’ 규제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였다는 점에 있어 괄목할 만한 정책 추진사항으로 볼 수 있음.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경우 지난 2020년 ‘하반기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통한 적극 행정을 펼쳐 그간 업계의 계속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변화를 꾀하지 못하였던 불합리한 조달체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특히 조달청의 경우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과 관련하여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구성하여 여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공공공사비 신뢰도 향상을 큰 폭으로 달성하였다는 점에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함.

<표 4> 2021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주요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 내용

담당 부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대상 확대(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 조정대상 추가) 및 금액기준 1/3 완화(종합공사 30억원 → 10억원, 전문공사 3억원 → 1억원) - 예정가격 초과 계약체결 불과 원칙 명확화(종합심사제,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 부정당 제재 사유인 중대한 위해 의미 구체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예규 개정(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강화 목적 종합심사낙찰제와 PQ심사 시 사고사망만인을 평가 강화 - 종합심사낙찰제 내 안전 평가항목 확대 -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입찰가격이 낮은 자 →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와 공사정지에 따른 지연보상금 지급 사유 구체화 -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개선(재무비율, 신용평가등급 중 자율권 부여) - 녹색건축 평가 강화(에너지효율 등급 →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 대체)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관련 전문공사의 경우 업종뿐만 아니라 주력업무 분야 기준 실적 심사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시 계약상대자 부담 완화(기 시공 완료 부분 귀속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8/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계약법령의 틀을 벗어난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先도입 → 시범 운영 → 後정규제도화 하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규모 2배 확대(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부정당제재 요청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상향(2~4개월 → 5~7개월), 과징금 부과율 2배 상향(계약금의 4.5% →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 시기와 내용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개 의무화 -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와 제안서 평가 등의 공정성 확보

<표 4> 2021년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조달청 주요 건설업 관련 정책 추진 내용-(계속)

담당 부처	주요 내용
조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 의무화(1/1) • 공공공사비 신뢰 확보(2/9, 3/18, 4/19, 7/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무·자재·장비량 등을 원가계산해 산정한 공사비에 대해 일정 비율 감액 조정 발주 관행 폐지 - 신규 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 마련 -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 적기 반영(연 2회 → 매월) -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 발굴·공개 확대를 통한 공사비 임의 삭감 방지 -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 현실화 - 가격조사 방법 개선(순환식 가격조사 및 가격견적 외 물량견적 방식 도입) -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 차이 발생 시 관련 협회 직접 수정의견 제공 창구 마련 • 입찰정보 제공 확대 및 입찰시스템 보완(9/30, 1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서류 전자제출 확대(배치기술자 자료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 -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조사내역서 공개, 설계도서 e-열람서비스 자체 발주공사까지 확대 - 입찰 참가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 구축 및 입찰제도 및 절차 실무교육 시행

2022년 또한 건설정책의 계속된 변화 불가피,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올해 주요 부처의 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선부른 향후 정책 방향 예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특히 2022년의 경우 새정부 출범 시기이며, 각종 법정 중기계획(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등) 또한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더욱 그러함.
- 다만, 지난해와 같이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둘러싼 안전관리 강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의 정책 등은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적극적 대비가 필요함.
 - 올해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경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시행할 것임을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관련 규제의 강화가 불가피할 전망이기에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관련한 여러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이뿐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우 2022년 공공 조달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고려할 때 공공공사에 적극 참여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건설기업의 경우 ESG 경영과 관련한 적극적 방향 모색이 필요함.
 - 또한, 계속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2022년 건설하도급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기에 개별 기업의 경우 기존 하도급계약 조건 및 입찰절차 내 불공정거래 사항 사전 점검 및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제도·규제 변화 사항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함에 따른 벌칙 부여 등의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해현경장(解弦更張)의 마음으로 정책 변화 방향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적극적 대응책 모색을 꾀할 수 있는 기민한 체계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전영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2022년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 6가지

- 코로나19, 대선, 탄소중립... 건설업에 영향 미칠 요인 다수 포진 -

2022년,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영향 클 전망

- 2021년 건설수주, 건설기성 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건설시장은 크게 성장하였고, 2022년도에도 외형적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 2021년 건설수주는 약 194조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그 증가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2022년도에도 건설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22년 건설산업은 산업 내외부로 부각될 다양한 이슈들로 인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주요국들의 경제정책 변화 그리고, 탄소중립 등 환경 관련 이슈의 본격적인 대두가 예상됨.
 - 대내외적으로는 2022년 대선과 그 이후 부각되는 디지털 전환, 고용 및 노동 관련 이슈 그리고, 재정투자 여력의 지속가능성 여부 등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된 이슈들에 대응하여 향후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선제적 노력이 필요함.

〈그림 1〉 2022년 건설산업 관련 주요 이슈



이슈 1 : 2022년 대선

- 2022년 대선은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과 여러 분야에서 정치적 논쟁의 가열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
- 아직까지 각 후보의 공식적인 공약집이 발표되기 전으로 건설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구체적으로 없으나, 지금까지 지역순회, TV토론, 보도자료 등에서 부분적으로 밝힌 공약들을 종합해볼 때, 각 후보 간 건설산업을 보는 시각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대선 후보들의 건설 관련 공약 비교

구분 \ 후보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지역균형	- 특성화 산업 육성 - 재정자주권 확대	- 다극체제형 발전모델 (권역별 메가시티) - 지방분권 강화	- 지역 특색 맞춤형발전 - 네트워크 고도화 - 지방교부세 5%p 인상	- 법적 권한, 재정적 권한 확대 - 민간기업 유치
인프라	- 탈원전 폐기 - 교통인프라 확충	- 감(減)원전 정책 - 고속도로, 철도 지하화 - 에너지 고속도로	- 탈원전 지지	- 탈원전 폐기
건설정책	-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 건설, 분양원가공개 - 개발이익 환수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적용확대 등)	
부동산	- 250만호 주택공급 - 공공임대 연평균 10만호, 청년원가주택 - 보유세 완화(중부세·재산세 통합, 공시지가 환원) - 양도세 개편, 취득세 완화	- 250만호 주택 공급 - 기본주택 - 국토보유세 신설 - 중부세 개편 - 양도세 중과유예, 취득세 완화 - 부동산 전담기구	- 장기 임대주택 20% 확대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민간공급규제 완화

-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는 후보들 모두 지방의 재정과 집행 권한의 확대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방식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육성 혹은 주요 거점지역 개발 등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
- 건설정책에 대한 공약은 현재까지 후보들이 밝힌 바가 거의 없음. 2022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그 방향은 정반대임. 이재명 후보의 경우, 건설원가 공개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음.
- 부동산 정책의 경우 후보들 모두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 간의 큰 인식 차를 보이고 있음.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큰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향후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담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각 후보의 그동안의 이력 및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건설정책 분야에서도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건설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큰 상황임. 또한, 현 경제, 사회환경을 감안할 때, 당선 이후에 내놓을 경제·건설정책 방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슈 2 : 디지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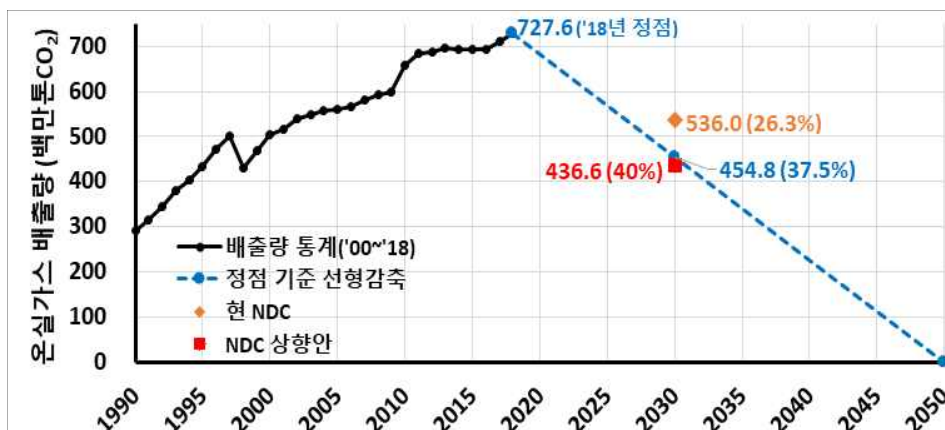
- 지난 12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후 사회,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은 산업데이터 생성자에 대한 사용 수익원 개념의 최초 도입, 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계약체결 권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선정·지원 근거 규정, 차관급 정부위원 포함한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에서 ‘디지털 뉴딜 2.0’ 추진 관련 예산 33조 7,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고, 탄소중립 등과 연계한 예산은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임.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산업기술 R&D 예산으로 5조 5,415억원을 편성하여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분야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 분야 R&D, 신사업 분야 R&D 그리고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지원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나설 계획임.
- 국토교통부에서도 디지털 트윈과 핵심 SOC의 디지털화 등을 통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국내 지자체들 역시 건설산업 연구개발 차원에서 디지털 건설기술 생태계 구축을 모색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메타버스 활용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음.
 - 창원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은 시정의 홍보 및 기업유치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는 별개로 공공 발주기관 그리고, 건설기업들의 디지털 건설기술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2022년도 이후부터 건설산업 내 디지털 전환 이슈가 더욱 크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이슈 3 : 환경정책 강화

- 2020. 10월,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한 해 동안 탄소중립과 관련된 각종 정부 정책이 뒤를 이었음.

- 정부는 2021.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안'을 통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림 2>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자료 : 정부합동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2021.10.18).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들도 앞다투어 산업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계획을 속속 발표하였음.
- 국토교통부도 이에 맞추어 2021.12월,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음.
 -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르면, 건물부문에서는 건물 생애주기별 성능정보 기반 구축 및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그리고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임.
 - 또한, 교통부문은 교통 데이터 통합관리, 사업용 차량 50만대 전기·수소차로 우선 전환,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친환경 철도·항공을 확대할 예정임
- 건설산업 내에서 법적인 요건 이외에 환경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에서 최근 국내외적인 환경정책 강화는 건설산업에게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임.
 - 국내적으로는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정책, 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건설의 주력 시장인 중동지역에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들이 환경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환경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임.

이슈 4 : 고용·노동 이슈 대두

- 2021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됨에 따라 본격적인 노동 이슈의 핵

심사안으로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업 차원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되어 제도화가 필요한 다양한 사안들이 경영자와 종업원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제도 정착과 제도 보완 등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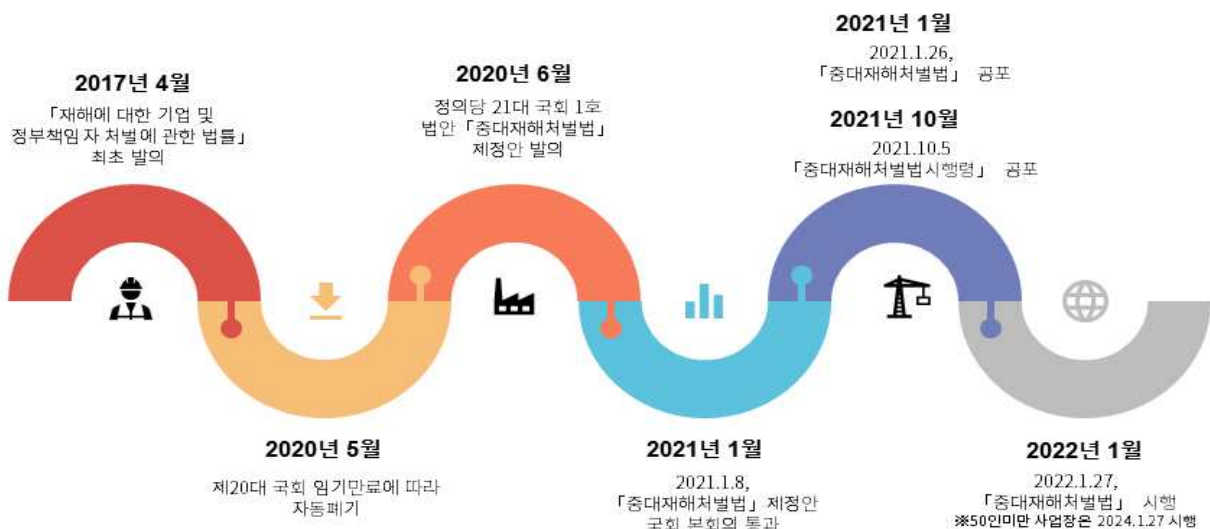
● 건설산업 내에서도 민간공사까지 일요일휴무제 확대 시행 등 여전히 논쟁이 심한 노동 관련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2022년에도 건설산업 내 노동 관련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지난 9월 국회는 2020년 12월 이후 공공공사에만 의무 적용 중인 ‘일요일 휴무제’를 민간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제65조의2 본문 개정)을 발의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임.
-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 일선에서 벌어지는 합리적인 공기산정 문제 등은 아직까지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2021.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이라는 점에서 2022년 중 건설산업 내 최대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공포된 데 이어 10월, 시행령이 확정, 발표되었고, 동법 부칙 제 1조에 따라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림 3>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법률명에서 볼 수 있듯이 예방보다는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많은 법률상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고, 특히, 동법이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우려의 목소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더욱 커지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이 사실상 무시됨.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개념의 불명확성,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법적 처벌기준 등이 여전히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는 상황임.

이슈 5 : 시험대에 선 재정투자

- 2022년 경제 화두로서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 정부가 2020~2021년과 같이 코로나19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음.
 - 코로나 19의 영향이 2022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투자 기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 경제의 조속한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이슈라 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앞서 12월 28일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90만 2,000개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으나, 종사자 수는 557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만 1,000명(13.5%)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코로나19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음.
 - 정부가 재정정책을 단행하면 거시적으로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정정책을 통한 총생산량의 증가는 정부승수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임.
- 물론,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빨라서 재정 여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지금은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빠르고 완전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경제 정상화를 도모할 시점이라는 점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재정투자의 운용방식 및 투자 대상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시점임.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노력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즉,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와 환경을 만드는 근본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이슈 6 : 주요국 경제정책

- 다수의 경제전망기관은 2022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는 각국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주요국들의 스태그플레이션 움직임 그리고 원자재, 첨단 기술부품 등의 무기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이와 함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2022년 세계 경제에 대하여 성장과 함께 글로벌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이는 국가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정부 주도하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으로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해왔으나, 이후 이러한 정책들을 정상화하는 단계에서 주요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임.
- 따라서 2022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다른 어느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라 할 수 있음. 건설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글로벌 건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 추진 동향

- 탄소중립 및 스마트화 등 세계적 이슈에 대응, 건설산업 제도개선 등은 지속 시행 -

■ 해외 주요국은 지난 1년간 친환경 등 저탄소, 스마트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추진

-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지난 1년간 주요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국가별 목표에 따라 중점 추진 분야가 일부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친환경·저탄소, 스마트기술 등 신기술, 민관 협력, 인력 양성, 경기회복 및 일자리 등 분야의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됨.
-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수립한 ‘Build Back Better’ 기조를 기반으로 주요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²⁾, 코로나19에 대한 지속적 대응 등 최근 전(全) 세계적 차원의 산업환경 변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의 저탄소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건설 및 인프라 관련 스마트기술 개발, 건설 분야 인력 양성, 공정거래 유도, 코로나19 대응 등 건설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추진해 옴.
- 일본 역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각종 정책 마련과 함께 건설 및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 및 산업 내 스마트기술 활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이와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건설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정거래 유도, 입찰·계약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국의 정책은 크게 ‘① 저탄소 및 친환경’, ‘② 건설기술’, ‘③ 민관협력’, ‘④ 인력 양성’, ‘⑤ 경기회복 및 일자리’ 등 분야로 구분 가능하며, 부문별 세부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bipartisan-infrastructure-law/>>, 접속일 : 2021. 12. 28.

2) GS칼텍스 미디어허브(2021. 6. 22),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 쟁점과 전망”, 재인용.

<표 1> 지난 2021년 주요 국가별 건설정책 추진 동향

구 분		국 가	주요 건설정책 추진 현황
저탄소 및 친환경	저탄소	미 국	• 탄소중립 추진전략 (2050년까지 순배출제로 달성 목표 제시)
		영 국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 발표 • 공공부문 탈탄소화 계획 기준 및 보조금 • 공공건물 및 주택 탄소배출량 절감 자금 지원 • 영국 고속도로, 2050년까지 순탄소제로 로드맵 마련 • 미래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기술 계획 발표
		일 본	• 지속 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저CO2 선도형) 선정 • 탈탄소 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 저에너지 대책 방향성 공표
	친환경	미 국	• LEED v4.1
		영 국	• 해상풍력플랜트 건설계획 마련 • 친환경주택으로의 개선 • 녹색기술 활성화 자금 지원 • 영국 인프라은행 자금지원사업 운영
		일 본	•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의 중점 지원 단체 선정
건설기술	스마트기술	일 본	• 인프라 분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책 마련 • BIM 기반 건축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시범사업 모집 • 무인건설혁신기술개발 추진 프로젝트 개시
		영 국	• 현대식 건설방법(MMC) 연구 수행
	신기술	일 본	• 도로시설 데이터베이스 운영 활성화 •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3자기관 등 공모 • 주택생산기술 이노베이션 촉진사업
민관협력	PPP	일 본	• PPP/PFI 지역플랫폼 협정제도 운용 • 민관협력 기반정비 추진조사비 운용 • PPP 협정 파트너 공모
	민간사업자 협력		• 포괄적 민간위탁 도입 검토
인력 양성	교육	영 국	• 신기술 무료 교육과정 운영 • 건설산업 분야 견습기회 제공 • 건설기술교육캠프 자금 지원
		일 본	• 건설기능 트레이딩 프로그램 확충
	지원책	일 본	• 국토교통성·후생노동성의 2022년도 예산 공동 요구안(인재 확보 육성 목적)
경기회복 및 일자리	-	영 국	• 주택 및 일자리 확보 자금조달 •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지원
기타	노후 인프라	미 국	•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공정거래	영 국	• 건설산업제도(CIS) 개정(하도급 등록 및 유지관리 정보 오류에 대한 벌금)
		일 본	• 「건설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독처분 기준」 등 개정
	코로나19 대응	미 국	• 직장 내 감염 대응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 마련
		영 국	• 외부 건설작업자 지침 업데이트
	사회적 책임	영 국	•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의무 수행
	입찰/계약	일 본	• 입찰계약 개선추진사업
	행정 개선	일 본	• 건설 컨설턴트·지질조사업자 보고서류 간소화
	근로자 처우	일 본	• 건설업 사회보험추진·처우개선연락협의회 운영

① 저탄소 및 친환경 : 각종 계획수립 및 금융 지원, 대체에너지 확보 등 탈탄소화 여건 마련

- 먼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전(全) 세계적 탄소중립 추세에 따라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저탄소 정책 마련과 더불어 대체에너지 확보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각종 전략 및 계획, 금융 지원책,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에너지 확보, 녹색기술 개발, 자금 지원 등의 친환경 정책을 마련함.
- 특히 지난해 영국은 탄소배출량 저감 등 탈탄소화와 대체에너지 확보 등 친환경 정책을 다수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 ‘공공부문 탈탄소화 계획’, ‘보조금 등 자금 지원책’, ‘고속도로 분야 탄소배출 저감 로드맵’,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기술 계획’ 등을 마련함과 더불어 친환경 정책으로 ‘해상풍력플랜트 건설계획’, ‘친환경주택화’, ‘녹색기술 활성화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함.
- 일본 역시 탈탄소화 및 친환경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 ‘주택·건축물 저에너지 대책 방향성’,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의 경우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와 100% 청정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함께 새로운 LEED 평가기준인 LEED v4.1을 제시함.

<표 2> 저탄소 및 친환경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저탄소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추진전략) 미국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와 100% 청정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세부 내용으로 ‘기존 그린 뉴딜 결의안’, ‘청정에너지 및 환경 관련 투자 혜택의 낙후 지역사회 환원(40%)’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계획)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지난 2020년 발표한 ‘녹색산업혁명 10대 중점계획’³⁾을 기반으로 제조 및 건설 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적 미래 구축을 위한 비전을 제시함. 구체적으로 저탄소 에너지 지원을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 (공공부문 탈탄소화 계획 기준 및 보조금)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2단계로 구분된 탈탄소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약 10억 파운드 수준의 보조금 제공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효율 부문에 최대 3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함. • (공공건물 및 주택 탄소배출량 절감 자금 지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영국연구혁신위원회(UK Research and Innovation)는 공공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4,40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혁신적 열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가정과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22% 감소시키고 에너지 비용을 최대 15% 절감할 것으로 기대함. • (영국 고속도로, 2050년까지 순탄소제로 로드맵 마련) 하이웨이 잉글랜드(Highway England)는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시공·유지관리·운영단계’에서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세부 내용으로는 2030년까지 운영단계, 2040년까지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2050년까지 도로 운행과 관련한 모든 부문에 대한 탄소제로를 목표로 함. • (미래 에너지 효율 향상 스마트기술 계획 발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오프젼(Ofgem)⁴⁾은 미래의 에너지 효율 향상, 탄력적인 에너지 네트워크 제공, 정부의 순탄소제로 관련 책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시스템 및 유연성 계획’⁵⁾ 및 ‘에너지 디지털화 전략’⁶⁾을 발표함.

<표 2> 저탄소 및 친환경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계속)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저탄소 (계속)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건축물 선도사업(저CO2 선도형) 선정]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은 저에너지·저CO2에 관한 선도적인 기술 도입 지원을 위해 주택·건축물 리딩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비와 건설공사비 중 선도적으로 평가된 항목과 관련된 비용의 50%까지 보조하며 프로젝트 당 5억 엔을 상한으로 지원함. • (탈탄소 사회를 위한 주택·건축물 저에너지 대책 방향성 공표) 국토교통성은 2030년까지 신축되는 주택·건축물에서 'Zero Energy House, Zero Energy Building' 기준의 저에너지 성능을 확보하고, 신축 단독주택의 60%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도입하도록 하는 저에너지 대책을 공표함.
친환경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ED v4.1) 미국녹색건축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는 지난 2021년 4월 '통합 프로세스, 위치 및 교통, 지속 가능한 위치, 물 효율, 에너지 및 대기, 자재 및 자원, 실내환경 품질, 혁신성, 지역 우선'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LEED v4.1을 발간함. 평가결과는 4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기존 LEED와는 '리더십 확보, 성취도 증가, 시장 확대, 성능 측정' 등의 차이를 나타냄.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플랜트 건설계획 마련)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녹색산업혁명 10대 계획 중 첫 번째 프로젝트로 2개 지역 항구에 최대 9,5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해상풍력 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함.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0GW의 에너지 생산과 해상풍력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 • (친환경주택으로의 개선)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전국의 주택 5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5억 2,600만 파운드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그린홈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연간 7만톤 이상의 탄소 저감을 기대하고 있음. 해당 계획은 단열재, 열펌프 및 태양광 패널 개선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주민들이 녹색에너지를 생산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기술 활성화 자금 지원)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탄소 포집, 온실가스 제거, 녹색산업혁명 핵심 기술 발전을 위한 자금(1억 6,650만 파운드) 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제로 달성(~2050년)과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 78% 수준으로의 절감(~2035년)에 기여하고자 함. • (영국 인프라 은행의 자금지원사업 운영) 영국 인프라 투자은행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지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목적으로 '청정에너지, 운송, 디지털, 수자원 및 폐기물'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함.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적 그린 인프라 모델 형성 지원의 중점 지원 단체 선정) 국토교통성은 그린 인프라³⁾ 활성화를 위해 컨설턴트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계획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 ② 건설기술 : 스마트기술 및 건설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범사업 등 기술 도입 준비

●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은 산업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등장한 스마트기술(또는 디지털 기술) 및 건설 신기술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난해에도 꾸준히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으로 거버넌스 정립, 관련 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시행, 보조금 등 자금 지원, 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시행함.

- 특히 일본은 건설산업 스마트화 및 신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다수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프라 분야 디지털 전환', 'BIM 기반 건축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시범사업', '무인건

3) HM Government(2020),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4) 에너지 규제기관(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 Ofgem).

5) 순제로 에너지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한 비전, 분석 및 관련 정책 제시.

6) 에너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련 정책과 비전 제시.

7) 일본의 그린 인프라란 Co2 흡수원 대책, 생태계 보전, 빗물 저류 침투 등을 통한 방재·감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공간 형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따른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거리 만들기 등 다양한 지역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활동을 의미함.

설혁신기술 개발', '도로시설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 활성화',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스템 운영 활성화', '주택생산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한 세부 정책을 추진함.

- 또한 영국 역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현대식 건설방법(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표 3> 건설기술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스마트 기술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시책) 국토교통성은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 및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변화와 안전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전담 본부를 설치 및 운영함. • (BIM 기반 건축생산·유지관리 프로세스 촉진 시범사업) BIM 기반 설계·시공 등을 수행한 건축 프로젝트 중 해당 효과검증이나 과제분석을 우수하게 시범 실시한 자를 선정하여 3,000만엔 이하의 비용을 지원함. • (무인건설혁신기술개발 추진 프로젝트 개시) 국토교통성은 향후 월면 등에서의 건설 활동을 고려하여 '자동화, 원격화, ICT' 등의 무인건설기술이 우선적으로 지상 건설산업 수행 시 기반 기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5년간의 연구개발을 추진함.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식 건설방법 연구 수행) 주택청(Homes England)은 영국 전역의 약 1,800채 주택사업을 대상으로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현대식 건설방법(MMC)을 적용하여 MMC 방법 별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해당 테스트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신기술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기관 공모) 국토교통성은 데이터 기반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주체(국가, 지자체, 고속도로회사 등)별 데이터 수집 및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데이터베이스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담당할 전담기관을 공모함. •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3자기관 공모) 국토교통성은 민간기업에서 개발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공공공사 신기술 활용 시스템(New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NETIS)'의 활성화를 위해 제3자기관을 공모함. • (주택생산기술 이노베이션 촉진사업) 주택·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신기술서비스의 개발·실증 관련 제안 응모자에게 해당 기술 개발 소요 비용의 50% 이내에서 건당 5,000만엔을 상한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술개발 기간은 최장 3년 이내임.

③ 민관협력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협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확보 방안 마련

- 민관협력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본의 경우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및 민간 건설 부문과의 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과 공공부문 간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확보함.
- 구체적으로는 'PPP/PFI 지역플랫폼 협정제도', '민관협력 기반정비 추진조사비 지원', 'PPP 협정 파트너 공모', '포괄적 민간위탁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함.

<표 4> 민관협력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PPP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PP/PFI 지역 플랫폼 협정제도 운용) 내각부(内閣府)와 국토교통성은 2019년부터 지역 내 산·관·학·금이 참여하는 PPP/PFI 지역 플랫폼과의 협정 체결을 통해 고도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자체에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표 4> 민관협력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계속)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PPP (계속)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기반정비 추진조사비 운용) 국토교통성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성장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지방공공단체의 인프라 정비 사업화 검토 시 지자체 조사 비용의 50%를 보조함. • (PPP 협정 파트너 공모) 국토교통성은 2016년부터 민간사업자와 4가지 유형(데이터베이스, 세미나, 금융기관, 개별상담)의 PPP 협정을 체결하여 예산, 행정지원 등 민간 PPP/PFI 추진을 지원함.
민간 사업자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민간위탁 검토) 국토교통성은 인프라 유지관리 시 민간사업자가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의 업무나 시설을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함. 해당 위탁 사업의 업무와 시설 범위는 다양하며, 복수 년도 계약 및 성능발주방식을 적용함.

④ 인력 양성 : 스마트기술 및 건설 신기술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추진 기반 마련

- 영국 및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건설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용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으로 견습기회 제공, 스마트기술 및 건설 신기술 관련 교육과정 확충 및 운영, 인력 육성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지난해 영국은 인력 양성을 위해 ‘건설산업 분야 견습기회 제공’, ‘신기술 무료 교육과정 운영’, ‘건설기술교육캠프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 또한 ‘건설기능 트레이딩 프로그램 확충’, ‘인재 확보 및 육성 목적의 공동 예산 확보’ 등 정책을 시행함.

<표 5> 인력 양성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교육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무료 교육과정)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는 기술격자 해소와 높은 수준의 직업 훈련기회 제공을 위해 디지털 건설 분야에 대한 온·오프라인 강의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함. • (건설산업 분야 견습기회 제공) 교육부는 최소 12개월의 견습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에의 참여와 고용주와의 근무를 통한 실질적 기술과 경험 습득이 가능한 견습기회 제공 사업을 추진함. • (건설기술교육캠프 자금 지원) 교육부는 최대 16주 동안 건설, 디지털 및 기술 분야의 기술 습득 및 고용주와의 인터뷰를 제공하는 건설기술교육캠프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활성화하고자 함.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능 트레이딩 프로그램 확충) 국토교통성은 다양한 기능 및 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통해 기능인력을 육성하고 ICT 기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
지원책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예산 공동 요구안)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은 ‘인재 확보(건설업 입직과 정착 지원), 인재 육성(젊은 기능인력 육성 등 환경정비), 환경정비(기능인력 처우 개선과 일자리 안정성)’ 등 건설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예산 공동 요구안을 작성하여 배정받음.

⑤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 공공사업에의 직·간접적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영국 등 일부 주요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 방안으로 건설 분야에의 직·간접적인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과 함께 일자리 확충을 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주택 및 일자리 확보 자금조달’,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함.

<표 6>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정책 추진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영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과 일자리 확보 자금조달)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은 신규주택 건설(1만 7,000개)과 일자리 (1만 9,000개) 창출을 위해 영국 전역에서 수행 중인 160개 프로젝트에 3,0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함. 해당 자금은 새로운 주택조성을 위한 인프라시설 건설, 잠재적인 개발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용 등에 투입됨. •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지원) 재무부(HM Treasury)는 향후 10년간 영국 전역의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6,500억 파운드 규모의 민간 및 공공투자를 통해 연간 42만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 및 지원할 계획임.

⑥ 기타 동향 : 노후 인프라, 공정거래, 코로나19, 건설 제도개선 등 기존 중점 정책 지속 추진

-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각종 정책 외에도 해외 주요국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거래 유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각종 건설 제도개선,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미국은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신규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을 마련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공정거래 유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위한 ‘건설산업 제도 개정’, ‘외부 건설작업자 지침 개정’, ‘건설폐기물 관리의무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함.
 - 이 외, 일본은 입찰·계약제도 및 행정, 근로자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계약 개선추진사업’, ‘보고서 간소화’, ‘건설업 사회보험추진·처우개선연락협의회 운영’ 등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표 7> 기타 정책 추진사항 및 세부 내용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노후 인프라	미 국	•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지난 2021년 11월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공표됨 ⁸⁾ . 해당 법안에 따라 ‘도로와 교량, 철도, 에너지 인프라, 상수도, 공항, 항만 ⁹⁾ ’ 등에 투자할 계획임.
공정거래	영 국	• (건설산업제도 개정)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은 하도급 등록 및 유지관리 시 개인이나 사업체 등록 관련 문서 검증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등에 대한 단계별 벌금을 부과토록 개정함.
	일 본	• (건설업자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감독처분 기준 개정) 건설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또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주임, 감리)의 현장배치(30일 이상), 공사목적물의 중대하자 발생(15일 이상, 저입찰가격 조사가 이뤄진 공사의 경우 30일 이상)’ 등 사안별 영업정지 기간 기준을 제시함.
코로나19 대응	미 국	• (직장 내 감염 대응을 위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지침) 산업안전보건국(OSHA)은 2021년 1월 ‘코로나19 관련 정보,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근로자 주의사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고용주와 근로자의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 ¹⁰⁾ 을 발표함.
	영 국	• (외부 건설작업자 지침 업데이트)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는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건설 및 인프라 산업 등 외부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지속 발표함.
사회적 책임	영 국	•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의무 수행) 환경청(Environment Agency)은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폐기물에 대한 관리의무(등록 폐기물 업체 활용 등)와 불법적인 투기·소각에 따른 벌금(최대 50,000파운드)을 발표함.

<표 7> 기타 정책 추진사항 및 세부 내용 -(계속)

구 분	국 가	주요 추진정책 및 세부 내용
입찰·계약 개선	일 본	• (입찰계약 개선추진사업) 국토교통성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채택된 지자체에 한해 '입찰 계약방식 검토 등' 전반적인 입찰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지원 사업을 진행함.
행정 개선		• (건설 컨설턴트·지질조사업자 보고서 간소화) 국토교통성은 행정절차 및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보고서 내 재무관계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자사 양식을 활용한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
근로자 처우 개선		• (건설업 사회보험 추진/처우 개선 대책) 국토교통성은 기능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건설 커리어업 시스템(전자카드와 기능인등급제 결합 운영) 활용, 사회보험 가입 철저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함.

■ 시사점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및 스마트화 등 전(全) 세계적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각국의 건설산업 현황이나 국가적 목표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영국은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배출 저감 및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스마트기술 확보 및 관련 교육 제공,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됨. 일본의 경우는 탄소중립 정책은 물론, 특히 건설산업 스마트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민관협력을 위한 정책 또한 다양하게 운용 중인 상황임.
- 정책 추진 부문별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산업 탈탄소화 및 스마트화 관련 정책이 다수 추진되었으며,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노후 인프라 개선, 공정거래 유도, 코로나19 대응,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우리 정부 또한 그간 '스마트 건설기술 및 건설 신기술', '민관협력', '건설인력 양성',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회복' 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중립' 등 비교적 최근 추진 중인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구체적이며 국내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해외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입찰·계약 개선, 건설산업 분야 제도개선 등 과거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온 분야에 대한 지속적 정책 추진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이광표(부연구위원 · leekp@cerik.re.kr), 김화랑(부연구위원 · hrkim@cerik.re.kr)

8) 세계법제정보센터(2021),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접속일: 2021. 12. 29.

9) 동아일보(2021. 12. 09), “‘인프라 투자로 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한 美”

1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2021), <<https://www.dol.gov/>>, 접속일: 2021. 12. 29.

건설산업, 호랑이를 타고 날아오르자!

새해가 시작되었다. 설날이 지나지 않아 엄격한 의미에서 임인년(壬寅年) 호랑이띠 해는 좀 기다려야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한해가 시작되었다.

2022년은 특별한 한해로 기록될 것이다. 3월의 대통령선거에 이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정치적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 종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 러시아의 갈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폭염과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 입장에서 2022년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 경제 규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다.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국가 예산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604.4조원, 그중 SOC 예산은 2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증가했다. GTX-B, 대장~홍대선 철도공사와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과 재개발·재건축·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건설이 예상된다.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중동 등에서의 해외건설 수주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이 경기회복, 확장적 정책 기조, 대규모 건설공사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추진하는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건설업체에는 자금조달 비용의 증가를 유발시킨다. 대통령 및 지방선거와 같은 정권 교체기에는 신규 공공공사의 발주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위 “대장동 방지법”은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민관 합동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올스톱” 되었다고 한다. 이같이 금리정책, 공공 발주 기피, 불합리한 규제 등은 건설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22년에는 건설산업의 내부에도 큰 변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안전 강화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비효율을 노정시켜 산업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상호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데, 공공 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은 20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종사하며 국내총생산의 15.2%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산업이다.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며,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전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요인은 강화하고 위축시키는 요인은 최소화하며, 건설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건설산업은 탄소 중립, ESG와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가상 및 증강현실, 로봇기술 등을 활용한 첨단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안전 시공으로 산업재해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건전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더 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호랑이는 두려움의 상징이지만, 산왕(山王), 산신(山神)으로 불리면서 토속신앙의 대상으로 귀신과 액을 쫓는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건설산업이 호랑이 등을 타고 펄쩍 날아오르는 임인년을 기대한다. <e대한경제, 2021.12.31>

박용석(선임연구위원 · yspark@cerik.re.kr)